

#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자료 모음

## 자료 1 노사정위원회 협상일지

- ▲12월26일=김대중 차기대통령, 박인상노총위원장에게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제안
- ▲12월27일=김 차기대통령, 배석범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노사정협의회 참여 요청
- ▲98년 1월13일=김차기대통령, 4대그룹 회장의 조찬회동에서 대그룹 개혁방안 논의
- ▲1월14일=노사정 3자, 노사정위원회 구성 합의
- ▲1월15일=노사정위 본격 발족, 노사정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협약 제정 합의, 고용조정문제 본격 논의
- ▲1월16일=노사정위 기초위 구성, 3자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한 의제선정 착수
- ▲1월20일=노사정위 3차 전체회의, 10개 의제 관련 공동선언문 채택
- ▲1월21~25일=1백20여개 세부 의제 선정 및 실천방안 논의
- ▲1월26일=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 비대위추진 재벌개혁방안 보고, 노동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행조치 요구
- ▲1월27일=외채협상 타결

▲1월27~30일=미타결 쟁점 압축

▲1월31일=민주노총, 노사정위 운영불만 성명발표뒤 불참

▲2월1~2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철야협상 1백20여개 의제중 71개항 합의

▲2월2일=제188회 임시국회 개최. 한국노총, 국민회의측의 고용조정 법제화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해 회의 불참. 민주노총, 고용조정 강행처리 방침 합의성명 발표. 국민회의, 고용조정 관련 절충안 위원회에 상정

▲2월3일=노동기본권 보장및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핵심 쟁점 논의

▲2월4일=노사정위 법적 상설기구화 합의. 6인 기초위 소위구성 미타결 쟁점 타결 시도

▲2월6일=노사정위 10차 기초위 회의및 6차전체회의, 철야협상끝에 타협 도출

## 자료 2 2.6 노사정 주요쟁점 타결내용

- ① 실업대책의 재원을 5조원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은 19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은 '99.7 부터 노동조합 허용 ( '98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 ③ 노동기본권 관련
  -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
- ④ 금년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
- ⑤ 고용조정관련법제는 조정안 (별첨)과 같이 '98. 2월중 법 개정
- ⑥ 근로자 파견제도의 대상업무는
  - 전문지식 기술 경험 분야는 POSITIVE SYSTEM으로
  - 단순업무분야는 NEGATIVE SYSTEM으로 1998년 2월중 법제정
- ⑦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 적용문제는 98년중 신정부 에서 입법 추진
- ⑧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98. 2월중 법개정)
- ⑨ 기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일부사항, 종합고용안정관련 일부사항,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관련 일부사항 등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2차 과제로 검토.

[별첨] <고용조정법제 정비 방안>



2월 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 회开到 참석한 노사정위원들.

① 조분명: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② 해고 요건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③ 해고회피노력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

④ 대상자 선정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자 선정
- \* 성차별 금지 규정

⑤ 해고절차

-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 노동부에 사전 신고

⑥ 재고용 노력 의무

⑦ 2년 유예조항 삭제.

### 자료 3      쟁점별 타결내용 요약표

의 제	타 결 내 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대책 자원 5조원(재정지원4조4천원에서 6천억원 증액)</li> <li>-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M&amp;A를 간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li> <li>- 해고회피노력 의무화</li> <li>-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해고자 리콜제도)</li> <li>- 해고 실직자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금융해택제공</li> <li>-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li> <li>- 근로시간위원회 을 상반기중 구성</li> <li>- 퇴직근로자에 사내복지시설 일정기간 제공</li> <li>-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명 규모 고용창출</li> <li>- 실업률에 따라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li> </ul>
대기업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li> <li>- 우리사주제 민주적 운영 보장</li> <li>-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99회계연도부터)</li> <li>- 대표소송권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li> <li>- 대기업총수 기초실 경영책임 부과</li> </ul>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6월전 관련법 개정)</li> <li>-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li> <li>- 교원 99년7월부터 노동조합허용(금년 정기국회 법처리)</li> <li>- 실업자에 대해 산별노조등 초기업 형태 노조 가입자격 인정</li> <li>-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연장</li> <li>- 사회보장 의보통합 일원화</li> <li>-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관</li> </ul>
고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해고 2년유예 삭제</li> <li>- 경영악화 방지위한 기업M&amp;A 정리해고시 60일전 노동부 신고</li> <li>- 근로자파견제는 전문기술직 포지티브식, 단순업무직 네거티브식</li> <li>- 고용조정법제 정비(2월중) 성차별금지규정 포함</li> </ul>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불임금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 기금제)</li> <li>-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보험 통합 방안 강구</li> </ul>

	- 사회보험관련 위원회에 노사참여 확대
<b>물가안정</b>	- 98년 물가상승률 9%억제, IMF추후협의 노사의사 반영 -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 소비자대표 참여
<b>국민대통합</b>	- 구속노동자 석방및 사면복권 대통령 당선자에 건의 - 98년 상반기중 경제청문회 개최 -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조속제정
<b>2차과제</b>	- 노조전입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 - 기업경영상 투명확보(경영참가법 제정등) - 종합 고용안정(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 도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실직자에대한 지방세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 민주적 노사관계확립(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 자료 4 2.6 노사정 공동선언문

우리는 지난 해 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서 부도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은 경제파탄으로 야기된 국난을 맞아 망연자실할 따름이었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근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벼랑끝에 서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과 고통분담의 결의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월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20일 각 경제주체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차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위기가 결코 일시적인 외환위기가 아님에 공감하고 국가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 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간의 국

민 협약을 이끌어 내어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하면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량실업과 고물가, 체불임금 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될 고용조정제도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무분별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데 향후 정책역점을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노사정 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통합 선언입니다. 노사정 세주체의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그리고 전례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이 전국민이 일치 단결해 국가 재도약에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과 국민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정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8. 2. 6.

##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